

# 법무사법원직 상법조문판례 정오표 및 추록

## [변경내용 개관]

- (1) 제3판 교재(1쇄, 2쇄)의 정오표, 24년 법무사 기출 추가, 24년 법원직 기출 추가, 24년 최신판례 예상지문 추가로 추록을 구성하였습니다.
- (2) 개정4판(25.2)의 교재와는 번호와 순서가 다를 수 있고,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추가부분은 추록에 담지 못하였습니다. 학습에 참고바랍니다.
- (3) 개정4판(25.2)의 교재는 오히려 페이지수가 줄었으니 그 점도 감안하기 바랍니다.

## [1] 법무사법원직 상법조문판례(24년 1월 개정3판\_1쇄) [정오표1]

[무지개복스: 하영태저]

최종수정일: 2024.08.20

P	수정 전	수정 후
112	문제10->정답 [X]	정답 [O]
209	문제91->정답 [O]	정답 [X]
342	문제36 해설 -상법 제466조 제2항.	상법 제391조의3 제4항, 상법 제466조 제2항/ 대판 2004.12.24. 2003마1575.
346	문제52->정답 [O]	정답 [X]
578	문제14->정답 [X] 해설: 대판 1992.6.12. 91다404146.	정답 [O] 해설: 대판 1992.6.12. 91다40146.
9	문제9->정답 [O]	정답 [X]
358	전환사채의 등기[514조의2] ③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자(2주간 내), 지점소재자(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변경이 있을 때에는 2주간내(본점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321	준용규정(425조) 제2항 ②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 납입의무(상305②)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 납입할 의무(상305②)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24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제431조) ② 신부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는~.	②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는
328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439조)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의절차(상232)를 준용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의절차(상232)를 준용한다.
329	주식병합의 절차(제441조) : 주식의 병합은~생긴다. 다만 채권자의	: 주식의 병합은~생긴다. 다만 채권자의 의의절차가 ~생긴다.

	악의절차가 ~생긴다.	
349	납입(제476조) ② 사채모집의~기재(상474②)하코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모집의~기재(상474②)와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84	-준용규정(111조) -기타특별상사유치권 ■ 상법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b>위탁자를</b> 위하여 점유	■ 상법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b>본인</b> 을 위하여 점유
94	14번 해설 위에서 9줄 ~적·목시적 합의가~.	~적·목시적 합의가~.
135	사원의 책임(제212조) <특징> -상법 제212조 제2항·제3항: 보충적인 책임이행의 요건(판)	<특징> -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 보충적인 책임이행의 요건(판)
254	98번 문제 해설보충 해설: -.	해설: <b>대판 1992.8.14., 91다4514.</b>
229	판례기출 2번 해설 기출표시=>문제로 이동 해설: ~허용되지 아니한다).[ <b>법무29</b> ]	[문제2] ~허용된다.[ <b>법무29</b> ] [해설] 주주총회 결의사항~허용되지 아니한다.
171	정관의 효력발생(제292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증필요(x) ■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의 정관작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증필요(x) ■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작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증필요(o) ■ 주식회사(상292)의 정관작성 ■ 유한회사(상543②)의 정관작성
50	상사유치권(제58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요건특징:</b> 상인간의 상행위/ 채무자소유의 물건·유가증권/ 일반적 견련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b>특별상사유치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비교</b> ■ 상법 제93조(중개업의 의의): 상사유치권(X)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요건특징:</b> 상인간/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 채무자소유의 물건·유가증권/ 일반적 견련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b>특별상사유치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비교</b> ■ 상법 제93조(중개업의 의의): <b>특별상사유치권(X)/일반상사유치권(O)</b>
75	대리상의 유치권(제91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b>특징:</b> 일방적·쌍방적 상행위(O)/ 채무자소유의 물건요건(X) <input checked="" type="checkbox"/> <b>기타 특별상사유치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비교</b> ■ 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쌍방적 상행위/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 상법 제93조(중개업의 의의): 상사유치권(X)	대리상의 유치권(제91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b>특징:</b> 상인간/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O)/ 채무자소유의 물건요건(X)/ <b>본인을 위하여 점유(O)</b> <input checked="" type="checkbox"/> <b>기타 특별상사유치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비교</b> ■ 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상인간/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 상법 제93조(중개업의 의의): <b>특별상사유치권(X)/일반상사유치권(O)</b>

84	<p>준용규정(111조)</p> <p>☑ <b>특징:</b> 일방적 · 쌍방적 상행위(○)/ 채무자소유의 물건요건(×)</p> <p>☑ <b>기타 특별상사유치권</b></p> <p>■ <b>상법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b>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p> <p>☑ <b>비교</b></p> <p>■ <b>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b> 쌍방적 상행위/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p> <p>■ <b>상법 제93조(중개업의 의의):</b> 상사유치권(×)</p>	<p>준용규정(111조)</p> <p>☑ <b>특징:</b>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일방적 ·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 채무자소유의 물건요건(×)/위탁자를 위하여 점유(○)</p> <p>☑ <b>기타 특별상사유치권</b></p> <p>■ <b>상법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b> 본인을 위하여 점유</p> <p>☑ <b>비교</b></p> <p>■ <b>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b> 상인간/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p> <p>■ <b>상법 제93조(중개업의 의의):</b> 특별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p>
88	<p>유치권(제120조)</p> <p>☑ <b>특징:</b> 일방적 · 쌍방적 상행위(○)/ 채무자소유의 물건(×)/ 개별적 견련성(○)</p> <p>☑ <b>기타 특별상사유치권</b></p> <p>■ <b>상법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b>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p> <p>☑ <b>비교</b></p> <p>■ <b>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b> 쌍방적 상행위/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p> <p>■ <b>상법 제93조(중개업의 의의):</b> 상사유치권(×)</p>	<p>유치권(제120조)</p> <p>☑ <b>특징:</b>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운송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개별적 견련성)/ 채무자소유의 물건(×)</p> <p>☑ <b>기타 특별상사유치권</b></p> <p>■ <b>상법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b> 본인을 위하여 점유</p> <p>☑ <b>비교</b></p> <p>■ <b>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b> 상인간/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p> <p>■ <b>상법 제93조(중개업의 의의):</b> 특별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p>
618	[문제8] 정답 [O]	[문제8] 정답 [X]
210	[문제97] ~제4호(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문제97] ~제4호(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280	<p>[문제217]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는~.</p> <p>[해설]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로서는~.</p>	<p>[문제217]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p> <p>[해설]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로서는~(대판 2021.2.18. 2015다45451 전합: 판례변경)].</p>
429	<p>53번 문제 해설 수정</p> <p>☑ <b>해설</b> 보험계약 대리에서 대리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법무17]</p> <p>정답: [O]</p>	<p>☑ <b>해설</b> 보험계약의 대리인이 고지의무를 부담할 때 대리인은 본인이 아는 것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고지해야 한다.[법무17]</p> <p>정답: [X]</p>
234	<p>15번 문제 해설 수정</p> <p>☑ <b>해설</b> 상법 제368조 제1항(완화할 수 없</p>	<p>☑ <b>해설</b> 상법 제368조 제1항(정관으로 보통결의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의결정족</p>

	다).	수를 가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으나 완화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법무사법원직 상법조문판례(24년 개정3판\_2쇄: 8월24일) [정오표2]

[무지개복스: 하영태저]

최종수정일: 2025.1.24

P	수정 전	수정 후
80	문제7	삭제
128	상법 제176조 다음에 보충	<p>■ <b>등기기간의 기산점 (제177조) ★</b></p> <p>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p>
319	문제26번 해설 상법 제423조 제3항(당연실권).	상법 제423조 제2항(당연실권).
528	문제18번 해설 대판1984.7.10,84타424.425.	대판 1998.4.23. 95다36466(전합).
528	문제19번 해설 대판 2956.4.26. 4288민상424(~).	대판 1956.4.26. 4288민상424(~).
580	정답수정 14.[O]	14.[X]
580	문제14번 정답수정 [O]	문제14번 [X]
621	문제319=>번호수정	문제11
621	문제11=>번호수정	문제12

[3] 법무사법원직 상법조문판례(24년 개정3판) [추록]

면(P)	추가내용
10	[12-1] 제약회사의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를 한 경우라도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원24]

	<p>[X]: 대판 1998.8.21. 97다6704(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p>
14	<p>[31-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법무24]</p> <p>[O]: 대판 1990.1.23. 88다카3250: 대판 1999.5.28. 98다34515(경리부장은 부포상에 해당하고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채무부담행위는 할 수 없다).</p>
14	<p>[31-2]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법무24]</p> <p>[O]: 대판 1999.5.28. 98다34515.</p>
21	<p>[22-1]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법원24]</p> <p>[O]: 대판 1988.2.9. 87다카1304(위법한 명의대여).</p>
40	<p>[6-1]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예상00]</p> <p>[X] 대판 2024.3.12. 2021다309927(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p>
58	<p>[67]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법원24]</p> <p>[O]: 대판 2021.8.12. 2021다210195.</p>
61	<p>[8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인인 매도인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법원24]</p> <p>[O]: 대판 2022.7.14. 2017다242232(일방적 상행위에 기한 행위도 상사시효 적용).</p>

68	<p>[3-1]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법무24]</p> <p>[O]: 대판 2011.11.24. 2010도5014.</p>
81	<p>[3-1]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법무24]</p> <p>[O]: 대판 1994.4.29. 94다2688.</p>
86	<p>[3]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법무24]</p> <p>[O]: 대판 2007.4.27. 2007다4943.</p>
90	<p>[1]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법원24]</p> <p>[O]: 대판 1983.4.26. 82누92.</p>
90	<p>[2]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법원24]</p> <p>[O]: 대판 2007.4.27. 2007다4943.</p>
109	<p>[4]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법무24]</p> <p>[O]: 대판 1997.11.14. 95다11009(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p>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110	<p>[20-1]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예상00]</p> <p>[X] 대판 2024.3.28. 2023다265700(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p>
111	<p>[7-1] 리스계약은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무24]</p> <p>[O]: 대판 1994.11.8. 94다23388(법적성질은 임대차·소비대차·매매 등이 혼합된 특수한 내용의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이고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p>
118	<p>[5-1] 실질적 1인회사의 발생원인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 다른 사원들이 명의대여를 하거나 1인 사원에게 지분을 양도 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정관이나 주주명부에 이름만 남은 경우가 있다.[법무24]</p> <p>[X]: 대판 2007.2.22. 2005다73020: 대판 1993.6.11. 93다8702.</p>
122	<p>[28-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면,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법무24]</p> <p>[O]: 대판 2024.3.28. 2023다265700.</p>
134	<p>[6-1]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권한을 상실시키거나,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법원24]</p> <p>[O]: 대판 2015.5.29. 2014다51541.</p>
174	<p>[7-1]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조항은 사실상 주주의 퇴사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예상00]</p> <p>[O]: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2.12.24. 2002다54691.</p>
174	<p>[7-2]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p>

	<p>해당 주주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정관 조항의 효력은 무효이다. 다만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유효하다.[00]</p> <p>[X]: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7.5.10. 2005다60147(이는 <u>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u>).</p>
185	<p>[60-1]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예상00]</p> <p>[X]: 대판 2024.6.13. 2018다261322(<u>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u>).</p>
206	<p>[80-1]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법무24]</p> <p>[O]: 대판 2018.7.26. 2016다237714.</p>
220	<p>[121-1]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법원24]</p> <p>[O]: 대판 1995.8.22. 95다19980.</p>
220	<p>[121-2]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법원24]</p> <p>[O]: 대판 2013.12.12. 2011다112247.</p>
220	<p>[121-3]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법원24]</p> <p>[O]: 대판 2013.12.12. 2011다112247.</p>
228	<p>[126-1]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항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법원24]</p> <p>[X]: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u>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u></p>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233	[10-1] 주주총회에서 총회소집 당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법무24] [O]: 대판 1979.3.27. 79다19.
235	[17-1]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법원24] [X]: 대판 2020.6.4. 2016다241515(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236	[26-1]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법원24] [O]: 대판 2007.9.6. 2007다40000.
243	[47-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법원24] [O]: 대판 2014.10.15. 2013다38633.
244	[54-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법원24] [X]: 대판 2022.6.9. 2018다228462(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49	[75-1]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법무24] [O]: 대판 1993.9.10. 93도698.
249	[77대체]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법무24]

	[O]: 대판 2014.11.27. 2011다41420.
250	<p>[82-1]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법무24]</p> <p>[X]: 대판 2003.7.11. 2001다45584(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u>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u></p>
255	<p>[108-1]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법무24]</p> <p>[O]: 대판 2003.7.11. 2001다45584.</p>
265	<p>[144-1]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p> <p>[O]: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p>
268	<p>[163-1]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하여야 하지,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에게 할 수는 없다.[법원24]</p> <p>[X]: 대판 1992.10.27. 92다19033(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u>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u></p>
268	[163-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법

	원24] [O]: 대판 2017.9.26. 2014다27425.
268	[163-3]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법원24] [O]: 대판 2022.5.12. 2020다255375.
268	[163-4]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법원24] [O]: 대판 2017.9.26. 2014다27425.
273	[182-1]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법원24] [O]: 대판 1995.4.11. 94다33903.
278	[172-1]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예상00] [O]: 대판 2024.9.13. 2020다245552.
278	[172-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없다.[예상00] [O]: 대판 2024.9.13. 2020다245552.
317	[23-1]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법무24] [O]: 대판 1995.5.23. 94다36421.
330	[13-1]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법무24] [O]: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
344	[45-1]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법무24]

	[X]: 대판 2010.7.22. 2008다37193(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366	[44 대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법원24] [O]: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367	[50-1]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법원24] [X]: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70	[6-1] 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된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제도는 거래안전 보호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법원24] [O]: 대판 2019.10.23. 2012다46170(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382	[3-1]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등(이하 ‘수해회사’라 한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 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해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법원24] [O]: 대판 2017.12.22. 2017다213197.
386	[5-2]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로되었으나 해산 당시 이사가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그 이사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법무24] [X]: 대판 1991.11.22. 91다22131(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로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86	<p>[5-2]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나 해산 당시 이사가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그 이사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법무24]</p> <p>[X]: 대판 1991.11.22. 91다22131(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p>
388	<p>[9-1]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법무24]</p> <p>[O]: 대판 1991.11.22. 91다22131.</p>
389	<p>[13]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법무24]</p> <p>[O]: 대판 1991.12.24. 91다4355.</p>
389	<p>[14]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법무24]</p> <p>[O]: 대판 2005.4.15. 2003도7773.</p>
402	<p>[66-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예상00]</p>

	[X]: 대판 2024.6.27. 2024다219766(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420	420-[7-1]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법무24] [O]: 대판 2006.6.30. 2006다19672,19689.
425	[37-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법무24] [O]: 대판 2018.4.12. 2017다229536.
432	[56-1]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법무24] [O]: 대판 2001.11.27. 99다33311.
432	[16-1]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온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선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예상00] [X]: 대판 2024.5.9. 2021다297352(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433	[62-1]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법무24] [O]: 대판 2001.11.27. 99다33311.
433	[62-2]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p>사항에 해당된다.[법무24]</p> <p>[X]: 대판 2003.11.13. 2001다49623(<u>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u>).</p>
434	<p>[66-1]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법무24]</p> <p>[O]: 대판 2008.1.31. 2005다57806.</p>
492	<p>[2]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훼되었다면,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법무24]</p> <p>[O]: 대판 2007.4.27. 2007다4943.</p>
492	<p>[3]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積付)에 있어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하여야 하나,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에 관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법무24]</p> <p>[X]: 대판 2017.6.8. 2016다13109(<u>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을 파악하여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u>).</p>
499	<p>[12-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법무24]</p> <p>[O]: 대판 2009.10.15. 2009다39820.</p>
499	<p>[12-2]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법무24]</p> <p>[O]: 대판 2009.10.15. 2009다39820.</p>
499	<p>[12-3]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p>

	<p>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법무24]</p> <p>[X]: 대판 2023.12.14. 2022다208649(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u>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u>).</p>